

새정치 전남지사 후보 경선 '공론조사' 변수

최고위원회, '여론조사 50%+ 공론조사 50%'로 확정

광주시장 경선물은 늦어도 주말까지 최종 결론 날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최고위원회에서 6·4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경선 물음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배심원 선거인단 공론조사 50%'로 결정했다.

하지만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물음 이날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23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말에나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하지만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이 경선 물음 합의한 뒤,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지사 후보 경선 물음 수 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주승용, 이낙연 후보 측은 중앙당의 경선 물음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반면 이석형 후보 측에서는 100%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선시행 세척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한국조사협회에 등재된 조사기관 2개를 선정해 임의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걸어 1000명씩 면접을 하게 된다.

공론조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규모를 정하게 돼 있는 가운데 1000명 가량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인

단은 중앙당의 전화조사에 응한 해당 선거구 유권자로 구성되며, 특정 장소에 모여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본 뒤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공론조사가 후보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고위는 최근 논란이 된 전남지사 A 후보 측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경선 방식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빠진 만큼 문제 삼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물음을 정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키워 가고 있다. 이와 관련 당 내에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모 공천위원회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물 등 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입장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경선 후보와 불확정은 늦을 경우 이번 주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장 경선 후보 및 불확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당장 광주시장 후보 선결과 관련,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밀약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공동 대표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광주시장 경선 후보 및 불확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물로 100% 공론조사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인지도 측면에서 약점이 있는 윤정현 후보 측이 선호하는 안으로 알려진데다 지도부에서도 통합적 측면을 고려, 이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9곳 지역인재 112명 우선 채용

올 채용인력 8.5% 해당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9개 공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인력 1310명 중 112명(8.5%)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한다. <표 참조>

광주시와 전남도, 국토교통부는 21일 "오는 29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포럼공사, 한국문화예술포럼공사, 한국문화예술포럼공사 등 9개 공기업이 참여하며, 올해 채용 요강 발표와 함께 현재 공기업에 재직중인 지역출신 선배들과의 상담시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 광주·전남 이전 공기업 채용인원

기관명	이전시기	2014년 채용인원 (잠정)	
		전체	지역
소계		1310	112
한국전력공사	2014년 11월	540	30
한전 KPS(주)	2014년 8월	376	25
한국농어촌공사	2014년 9월	259	3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12월	40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년 8월	30	11
한국전력거래소	2014년 10월	29	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5월	27	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기원	2015년 12월	6	1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	2014년 4월	3	3

특히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는 신규 채용인원 3명 모두를 광주·전남지역 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이전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공기업에는 올해부터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동채용설명회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59명 중 30명, 한국인터넷진흥원 40명 중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명 중 11명, 한국전력거래소 29명 중 3명, 한국인터넷진흥원 27명 중 5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기원 6명 중 1명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심각 김한길(왼쪽부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전병헌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고·외고 등 학원 대상 입학설명회 못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문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이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 학교는 외고를 비롯한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자율학교가 해당된다.

이들 학교는 사교육 관련 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고, 특정 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일부 자사고가 특정 사교육

업체 후원으로 입학 설명회를 열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자사고와 외고는 11월 원서 접수를 앞두고 9월에 입학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고는 이보다 이른 6월에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원서를 접수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여는 사례가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대해 사안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고교 입학 설명회에서 중학생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나 학교생활 기록부, 중학생의 내신 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해 입학설명회 참석자들을 우대하는 등 자기주도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학생 개인정보를 입학전형 등에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부, 중학생의 내신 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해 입학설명회 참석자들을 우대하는 등 자기주도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학생 개인정보를 입학전형 등에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역단체장, 예비후보 사퇴할 직무복귀 가능"

안행부, 광주시 등 질의 회신... "권한행사 할 수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일각에서 '선거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일시 정지된 현역 단체장이 중도 사퇴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안행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의 직무 복귀 가능 여부에 관한 광주와 경남·북 등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예비후보자를 사퇴하면 단체장 직무에 복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중도에 사퇴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지를 안행부에 질의했다.

광주시는 관계처는 "안행부에 문의한 결과, 현역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더라 중도 사퇴하면 직무 복귀가 가능하며, 후보 등록기간(5월15~16일)에 다시 등록하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자치단체 행정은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현역 단체

장은 인지도 등에서 '프리미엄'이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이나 공천이 골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도 광주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김양수 장성군수, 김일태 영암군수, 허남식 곡성군수, 정중태 보성군수, 이명홍 장흥군수, 정기호 영광군수 등 7명이 연임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26명에 이른다.

그러나 단체장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후보 확정 또는 당선에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거나, 아예 공천 가능성이 작아져 재선 도전 대신 남은 임기를 완전히 누리려는 단체장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더라도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일각에서 '선거연기론'이 제기되면서 예비후보 사퇴 후 직무복귀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4-39호

장성 황룡행복마을 대지조성사업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용지의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장성 황룡행복마을 일원

2. 공급대상

공급종도	필지수	필지규모	분양예정가(원)	신청예탁금	공급방법
단독주택용지 (한옥형)	90	390.0~704.0	76,635,000~145,024,000	예정가 100,000천원이하 : 5백만원 예정가 100,000천원초과 : 7백만원	추첨

※ 공급대상토지의 세부 필지 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록 참조

※ **현가합인 : 10필지이상 토지매입 시 현가합인 실시**

※ 본 사업지구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로서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및 장성군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한옥건축시 보조금 및 용자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접수 및 신청자격	추첨	계약체결	신청 및 추첨장소	계약장소
'14. 5. 27(수) 10:00~16:00	'14. 5. 27(수) 17:00	'14. 5. 27(수) ~ '14. 5. 28(목) 10:00 ~ 17:00	장성 황룡행복마을 분양사무실	전남개발공사 8층 분양보상실

※ 추첨대상 중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14. 5. 14(수)일부터 선착순 수익계약 가능

※ 기타 자세한 공고내용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jndc.c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힐링의고장 장성황룡행복마을

본 광고 이미지는 조감도로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나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